향후 5년, BTO · BTL 사업 규모 대폭 늘어날 전망

- 2011년까지BTO 20조원 · BTL 25조원수준의투자예상 -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가 처음 도입된이래정부의 정책적지원등에 힘입어 민간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있다.

민간투자규모는1995 97년 0.3조원수준에서2006년에는3.2조원규모로대폭늘어났다.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 투자 비중도 1996년 1.2%에서 2006년 17.4%로 대폭증가하는등SOC 시설의조기확충에크게기여하고있다. 2006년말현재SOC 민간 투자 사업은 총 146개 사업에 총투자비 42.2조원 수준(실시협약체결 기준)으로 이 가운데 53개 사업(총투자비 37.5조원)은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 의심의를거쳐국가가직접관리하고있다.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을통해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민간 자본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사업시행방식의다양화와함께 투자대상또한기존의 35개에서 44개로확대됨으로써 그동안 민간 투자가 어려웠던 학교, 문화시설, 군주거시설, 노인주거 · 의료시설등국민들이꼭필요로하는생활기반시설까지민간투자가확대되었다.

투자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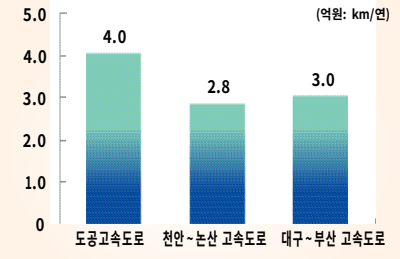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인프라 분야에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경쟁원리가 취약했던 SOC 분야의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을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민자사업에서는 일부 재정 사업에서 나타났던 공기 연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민간의 이윤 동기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해소하도록하는등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있다.

민자사업의경우재정사업과달리공기 연장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분석하는 시각도 단순한 투입 비용의 관점에서 벗어나 건설 · 운영을 포함한 사업 생애주기 차원의 총사업비(Life Cycle Cost)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재정 사업 대비 투자효율성을높이는데큰기여를하고있다.

민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원칙에의해극히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확정된 총사업비의 변경이 허용되지않도록 관리하고있다. 최근 실시된조사결과에의하면시설운영비용도민자사업이재정사업보다평균30% 더저렴한(도로사업기준) 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 기존의 물적 · 인적 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에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기초한신용대출로전환하도록하는등프로젝트금융활성화및프로젝트관리능력제고에기여하였다. 아울러인프라펀드설립활성화등을통해투자자들에게간접투자기회를확대제공하는등연관산업발전에도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간투자제도운영초기 단계에서시행된 일부사업에서운영수입 보장소요가과다하게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민간제안사업에대한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는 등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대폭 개선한 바있으며, 통행료상한제설정등을 통하여 민자 사업의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책정되도록최대한유도하고있다.

재정/민자 고속도로 km당 연간 시설 운영비



*최근민자도로운영비(평택~시흥, 인천~김포등) : 평균 2.7억/km/연수준

정부, 향후에도 민간 투자 지속 확충

정부는국민생활의편익증진과성장동

민간 투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조원, %)

구분	1995 97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전체 SOC 투자	25.0	16.2	17.2	19.1	21.6
재정 투자	24.7	15.2	16.0	17.4	18.4
민간 투자[1]	0.3	1.0	1.2	1.7	3.2
민간 투자 비중	1.2	6.6	7.5	9.8	17.4

주: 1) 수익형민자사업(BTO) 기준.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내용

구 분	종전	개선 후(2006. 1 현재)	
		정부고시	민간제안
보장 기간	15년	10년	폐지
보장 수준	초기 5년 90%(정부 고시), 80%(민간 제안) 5년 경과시 10%p씩 축소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보장 요건	50% 미만시 운영 수입 보장 배제	좌동	

력확충을위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지출등미래대비투자소요는증가하는반면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재원은부족한 점을감안해재정투자부족분을민간투자로적극보완해나갈계획으로있다. 앞으로는민자사업활성화와함께민자사업의질적내실화를도모하기위해재정절감효과가크고시설운영에있어민간의창의와효율을발휘할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선정해대상사업선정의합리성을최대한확보해나갈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민자사업관리를통해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민자적격성조사제도를강화하여사업타당성에대한검증을강화해나가도록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 인프라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의민자사업에대한참여를적극유도함으로써 투자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시행조건의최적화도도모해나갈계획이다.

BTO, 향후 5년 간 20조 25조원 투자

수익형민자사업(BTO)의경우참여정부기간동안총 8.7조원의민간투자를실시한 바있다. 그리고2007년부터2011년에이르기까지 연간 4조 5조원씩 향후 5년 간 총 20조 25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로 사업의 경우 수도권 고속도로와 대도시권혼잡도로및지방도정체구간위주로추진해나갈방침이다. 철도사업은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경전철 · 도시 철도 위주로추진해나가되중량전철의경우대도시광역교통난해소와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수익성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BTL 사업도 안정적 투자 추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도입 첫해인 2005년에 3.8조원, 2006년에는 7.2조원을 고시하는등최근2년간 11조원을고시하였다. 대상 시설도 해마다 꾸준히 확대되어, 2005년초중등학교 · 하수관거 · 군숙소등에서 2006년도에는 일반 철도 · 노인 복지 시설등이추가되었고, 올해에는국립대학교 · 정보통신망등이포함되었다.

연도별 고시 한도는 2007년 9.9조원을 정점으로하여 2008년이후연간4조 5조원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노후 · 협소한군인아파트및병영생활관개선, 생활환경개선및침수피해방지를위한 하수관거정비, 초중등학교신 · 개축등지속적으로확충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적정투자규모를유지해나가고, 도서관 · 박물관, 공공보건의료시설등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휘가 용이한 문화 · 복지 시설은복합화등다양한형태로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된다면 기존 44개 시설 이외에 민간의 효율적 참여가 기대되는 시설 유형의 추가 발굴로향후고시규모는다소늘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연간고시계획을바탕으로 2007년부터BTL 사업에대한민간투자가본격화되어 2011년까지 연간 5조 6조원 규모의투자가이루어질전망이다.

재정 부담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민간투자사업의활성화와함께용지보상비, 건설 보조금 등과 같은 정부 재정 부담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자사업추진에따른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부담을 중장기적으로관리할 재정준칙을마련할 필요가있다. 예컨대민간투자선진국인영국의경우 민간투자사업(PFI) 추진으로인한재정부담이세출예산의2% 내에서안정적으로관리되도록노력하고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민자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부담의대부분이일반회계와특별회계인점을감안해민자사업추진으로인한재정 부담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세출 예산(순계)의 2%를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필요가있다.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해 나갈 것

현재우리나라재정여건을감안할때당분간SOC에대한재정투자규모가크게늘어나기는 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민간 투자사업의역할이 더욱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엄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검증, 총사업비및수익률의적정관리, 사업자선정및평가등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제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진행되도록관련 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해나갈것이다.

조용만
기획예산처민간투자제도팀장